

사드 보복에... 전남 농수산물 中 수출 반토막

지난 1월 200만달러 ... 1년전보다 42% 급감

유자차 64%, 미역 91% 등 '효자품목' 고전

전남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액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 여파로 대폭 줄었다. 중국이 단기간에 제재하기 어려운 공산품의 수출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남 농수산물 중국 수출액은 200만 달러로, 지난 2016년 1월 340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41.6%)가 급감했다. <관련기사 8면> 수출액이 가장 많은 유자차가 70만 달러로 63.6% 감소했으며, 미역(91.4%), 김(26.1%), 로열젤리(41.8%) 등 '효자 품목'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1월 10만 달러 수출액을 보였던 오리털은 조

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수출물량이 전무했다.

사조 화인 코리아는 지난해 6~11월 전남에서 키운 닭을 가공한 삼계탕 45t을 중국에 수출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중국 측으로부터 공급 요청이 끊기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남도는 AI 보다는 사드 여파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I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된 닭은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됐으니 그 외 지역 물량에 대한 요청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삼계탕은 얼어치기 가공 후 수출돼 AI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역 농수산물 가운데는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난 전복, 톳 정도만 수출량이 늘었다. 톳은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전복은 올해 처음으로 1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농수산물은 중국 입장에서 중간재 성격의 공산품보다 수입 물량 조절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산품은 한국산 부품을 쓰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공급사슬을 쉽게 바꾸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은 중국 내 검역이 강화되면서 물량이 반쯤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도 공산품 수출액은 지난 1월 6억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4억8000만 달러)보다 증가했다. 석유제품이 지난해 1월 253만 달러에서 올해 1월 429

만 달러로 69.8%p의 증가세를 보였고, 정밀화학(68.2%p), 석유화학(44.8%p), 철강(28.6%p) 등도 수출량이 대폭 늘어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국 수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개척단 파견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감소세 반전을 시도하겠다"며 "당분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수출국 다변화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농수산식품의 기존 거래선 강화 및 신규 수출거래선 발굴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일간 목포에서 기존 수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본은 물론 아랍에미리트, 태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의 바이어 20명, 도내 농수산식품업체 70곳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내구연한 지난 소방차 93대 교체

사다리차·펌프차 포함

전남도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소방차들이 모두 교체된다.

13일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13개 소방서가 보유 중인 소방차량은 펌프차 228대, 구급차 91대 등 모두 565대다. 이 가운데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사다리차 등 주력 소방차는 모두 364대다. 소방본부는 주력 소방차 중 17%에 달하는 노후 소방차 62대, 신규 차량 8대, 구급 차량 20대, 구조 차량 3대까지 포함해 모두 93대를 올해 교체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방안전교부세 16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이 투입된다.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모두 474억원을 들여 250대의 낡은 소방차를 교체해 가나 보강했다.

소방장비 관리규칙 상 노후 기준은 펌프차 10년, 고가 사다리차 12년, 행정차 8년, 구급차 5년 등이다.

소방차 교체에는 2015년부터 담배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큰 몫을 했다. 소방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2015년 3141억원, 지난해 4147억원, 올해 4588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전남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남 소방차 300여 대가 구매 5년 미만의 새 차로 바뀌었다"며 "올해 사업에는 고층건물 화재 시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고가 사다리차와 최첨단 소화 약제 시스템을 탑재한 고성능 펌프 차량이 포함돼 재난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중소도시에 임대주택 짓고 주변 마을 정비

오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합평서 첫삽

지방 중소 도시에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주변 마을의 정비사업까지 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합평에서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합평군 대동면 일대 '합평 향교 공공주택지구'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첫 착공식을 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중소 도시나 읍면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으로 공공임대 단지를 조성하면

서 주변 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도 수립한다.

지금까지 합평을 비롯해 웅진 백령, 충북 괴산 등 33개 지역이 사업지로 선정됐고 이 중 11개 지역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합평 향교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120가구와 영구임대주택 30가구 등 총 150가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된다. 이곳은 군 중심지로서 군청, 면사무소, 전통시장, 초등학교 등 각종 공공·편의 시설과 가깝고 인근에 동합평 산업단지,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등이 배후 주거지 수요도 높다.

연합뉴스

광주교육 정책도 실명제 도입한다

김동찬 시의원 조례 발의

임안 공직자 이름·내용 관리

광주교육의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는 그 이름이 영구, 기록·관리된다.

광주시의회는 시 교육 정책 입안자 등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동찬(민주·북구 5)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광주교육 시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과 재정적 이유는 물론 제도적 근거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 관계자와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

록과 관리·공개해 지역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담보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주요 정책 실시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했고, 정책실명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효율적인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정책기획관을 책임관으로 지정했다.

각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을 평가해 우수 사업부서와 정책수행자는 포상하기로 했다.

김동찬 의원은 "교육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광주교육 행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1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사드한국배치 저지 광주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키리졸브 훈련의 즉각 중단과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드한국배치 저지 광주행동은 오는 18일 오전 9시 광주시청 앞에서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경복 성주행 평화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버스 참가단 모집은 16일까지로, 참가비는 1인당 2만5000원이다. 참가신청 전화번호는 010-5542-3494.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현안사업 7건 정부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국제 수목화비엔날레·호남권 잡월드 건립 등

'2018 전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사업비 40억원)', '미래 신성장동력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214억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잡월드) 건립(485억원)' 등이 가가스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여수와 장성에는 행복주택 400호와 공공임대주택 15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전남도는 13일 "최근 열린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남도가 제출한 9개 사업 가운데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357억원)과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사업(100억원)이 각각 재검

토, 반려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7건은 모두 조건부 평정을 받았다. 2018년 전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후 사업 추진, 국내 미술계 등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 행사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행사 수입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미래신성장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연차별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협약 체결, 추가 지방재정부담 없도록 조치 등을,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시설 및

프로그램별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 수요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각각 조건으로 했다.

여수 관문지구와 서교지구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229억원과 2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행복주택 200호씩 오는 2019년, 2020년 들어서게 된다. 장성군에도 213억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돼 영구임대 40호, 국민임대 110호 등 15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광양시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170억원)은 시설별 운영계획과 이용객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

화사업은 중앙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나주읍성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투자심사 제외사업 결정 등을 이유로 재검토, 반려 처분을 받았다.

22개 시·군이 제출한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관련 전남도 심의에서는 24건 가운데 전남도 분청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 구축(180억원), 순천시 RPC시설 현대화사업(57억원), 고흥군 도덕면 정사건립사업(28억원), 무안군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52억원) 등 7건이 적정 평정을 받아 당장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나주시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95억원), 고흥군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73억원), 영암군 한국드러그인센터 건립사업(91억원) 등 16건은 조건부,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조성(98억원)은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윤현석기자chadol@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